

문희상 신임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

부의장에 이주영·주승용 의원... 45일만에 입법부 공백 해소된 셈

문희상 의원(6선)이 13일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지난 5월29일 전반기 국회가 종료된 후 45일만에 입법부 공백이 해소된 셈이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치러진 국회의장 선거에서 단독 후보로 나서 총투표수 275표 중 259표를 얻어 당선됐다. 임기는 20대 국회가 끝나는 2020년 5월까지다. 국회법에 따라 문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됐다. 의장은 당선된 다음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문 의장은 당선인사에서 "후반기 국회 2년은 협치를 통해 민생이 꽃피는 국회의 계절이 되어야 한다"며 "새 정부 출범 1년차는 청야대의 계절이었지만 2년차부터는 국회의 계절이 돼야 국정이 선순환 할 수 있다. 아무리 잘 써진 영화 시나리오도 제작에 들어가지 못하면 개봉조차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 후반기 국회 진용 구축

비서실장 박수현 전 靑 대변인 국회 사무총장 유인태 전 의원

문희상 신임 국회의장이 지난 13일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을 의장 비서실장으로 선임하는 등 20대 국회 후반기 업무를 지원할 새 진용을 구축했다.

문 의장은 이날 의장 비서실장(차관급)에 이기우 전 국회의원, 정책수석비서관(1급)에 윤창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국회대변인(1급)에 이계성 한국일보 논설고문을 각각 임명했다.

아울러 "개혁입법, 민생입법의 책임은 정부여당의 책임이 첫 번째다. 집권 2년차에도 야당 탓을 해선 안 되는 것"이라며 "단 야당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협상 태도를 갖춰야 할 것이다. 요구할 건 요구하되 내줄 것은 내주는, 적대적 대결이 아닌 경쟁적 협조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국회 부의장에는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5선)과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4선)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이

부의장은 총 267표 중 259표를, 주 부의장은 총 254표 중 246표를 얻었다. 이들은 2020년 5월까지 부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들은 협치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문 의장, 주 부의장과 함께 우리 선배·동료 의원 한분 한분과 소통을 잘 하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미래정당으로서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잘 모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정실에서 신임 의장비서실장·정무수석비서관·정책수석비서관·국회대변인에 임명장을 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계성 대변인, 박수현 의장비서실장, 문희상 의장, 이기우 정무수석비서관, 윤창환 정책수석비서관.

1964년생인 박수현 신임 의장 비서실장은 충남 공주 출신으로 제19대 국회의원(민주통합당)을 지냈다. 민주당계 원내대변인과 대변인, 당대표 비서실장, 전략홍보본부장 등을 두루 거쳤고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다.

6·13 지방선거에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로 출마했다가 안희정 전 지사의 '미투 파문'에 이은 본인의 스킨들로 후보를 사퇴했다. 문 의장의 당선으로 박 전 대변인은 정계에 다시

복귀하게 됐다. 이기우 정무수석비서관은 1966년생으로 성균관대 총학생회 회장 출신이다. 제17대 국회의원(열린우리당)으로 국회에 입성했고,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과 경기도 사회통합부시자 등을 지냈다.

1961년생인 윤창환 정책수석비서관은 동국대 정치학 박사를 수료하고 이화여대 정책대학원 겸임교수, 한국정보통신개발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국회

대변인에는 이계성 한국일보 논설고문이 임명됐다.

한편 국회 사무총장에는 유인태 전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정무수석으로 지내며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 문화상 당시 비서실장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을 보좌했다.

국회 관계자는 "사무총장의 경우 국회법에 따라 국회 인준이 필요한 만큼 조만간 관련 절차를 밟은 뒤 임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시스

기무사 특수단 구성 오늘부터 본격 수사

해·공군 출신 군 검사·검찰 수사관 등 30여명 계엄령 문건 사건·세월호 유족 사찰 수사팀 분리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사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수사할 특별 수사단이 지난 13일 수사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수사에 본격 착수한다.

특수단은 수사기획팀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담당할 수사 1팀, 계엄령 관련 문건을 담당할 수사 2팀으로 분리해 활동한다.

수사기획팀은 공군 중령 군 검사를 포함해 3명이며, 수사총괄은 해군 대령 군 검사가 맡는다. 수사 1·2팀은 중령 군 검사를 팀장으로 영관급 군 검사 1명, 위관급 군 검사 3~4명, 수사관 7~8명으로 이뤄졌다.

특수단에는 총 15명의 군 검사가 참여한다. 영관급 7명, 위관급 8명이다. 육군과 기무사 출신 군 검사는 배제됐다.

특수단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한 뒤 16일부터 공식적으로 수사업무를 착수할 예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11일 수사를 총 지휘할 특수단장에 전인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임명할 데 이어 이날 수사단에 참여할 군 검사 임명도 완료했다.

특수단은 국방부 영내에 있는 독립된 건물에 사무실을 꾸리고, 다음달 10일 까지 날 달간 운영된다. 수사가 더 필요할 경우 활동시한을 연장할 수 있는데 30일씩 총 3차례 연장 가능해 경우에 따라 최장 12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수사 상황에 따라 민간 검찰인 서울중앙지검과 공조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시스

군인권센터는 10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을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지검은 이 사안을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독립수사단이 꾸려지고,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기한이 촉박해 초반부터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된다.

특히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경위 뿐 아니라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도 함께 다루면서 전횡적 기무사 요원들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불가피해 기무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문건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과 작년 3월 최초 보고를 받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도 소환해 조사를 받게 된다.

수사 상황에 따라 지난해 탄핵정국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지난 3월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고 외부로 통해 알려지기 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특수단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일체 지휘를 받지 않고 보고도 하지 않는 등 완전히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문 대통령은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난 10일 지시했다. /뉴스시스

홍영표 "협력업체 쥐어짤 것이 글로벌 1위 기업 삼성 만든 것"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협력업체들을 쥐어짜고 쥐어짤 것이 오늘의 글로벌 1위 기업 삼성을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여성경제포럼에 참석해 "20년 전의 삼성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지금의 삼성은 어떤 모습인지 비교해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996년부터 2016년까지 20년간 우리나라 가계소득은 8.7% 줄어든 반면 기업소득은 8.4%가 올라갔다"며 "삼성이 글로벌 기업이 되는 동안 가계는 오히려 더 가난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유를 찾아보니 기업이 돈을 벌었을 때 임금으로 나가는 '임금소득 기여도'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았다"며 "삼성이 지난해 60조원의 순이익을 냈는데 이 중 20조원만 풀어도 200만명에게 1000만원을 더 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이들의 지불능력을 높이는 정책을 한편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대기업 단가 후려치기 등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남북경제만 잘 풀려도 우리 경제는 새로운 블루오션을 갖게 될 것"이라며 "남북관계가 풀리고 평화가 진전되면 대한민국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출구를 갖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시스

민주당,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등 전대를 확정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중앙위원회의를 열어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를 별도로 선출하는 등 내달 25일 열리는 전당대회 규정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전국 선출직 최고위원 5명과 지명직 최고위원 2명 도입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내달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분리해 선출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한다.

지역별 권역별 최고위원과 노인·청년 최고위원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뉴스시스

다만 여성 최고위원회 할당은 도입해 최고위원 선출 과정에서 상위 5명에 여성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5위 남성 대신 여성 중 최고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자가 당선된다.

또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은 대의원 현장 투표 45%와 관리당원 ARS 투표 40%, 일반 국민과 일반 당원의 여론조사를 각각 10%와 5%로 반영하기로 했다.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 대표가 2명을 지명하고, 최고위원 의결을 거쳐 당무회의 인준 절차를 거쳐 된다. 당 대표 권위시 직무대행 순위는 원내 대표가 우선하며, 이후 선출직이 호선 순으로 맡기로 했다. /뉴스시스

북미 비핵화 합의 이행 촉구... 문 대통령, 국제사회 의무 강조

후속 협상 과정서 합의 좌초 우려... 종전선언 염두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북미 정상회담 결과물인 '센토사 합의'가 국제사회의 약속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에 나서려는 촉구 메시지를 북한과 미국 양쪽에 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싱가포르 오차드 호텔에서 열린 '제42회 싱가포르 렉처' 연설 후 일본일대에서 센토사 합의와 관련해 "(북미) 두 정상이 직접 국제사회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실무 협상 과정에서는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겪는다 하더라도 결국 정상들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약에 국제사회 앞에서 두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용어에서 흔히 쓰이지 않는 '실질'이라는 다소 강한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센토사 합의' 이행을 강조한 것은 그만큼 북미 정상 간 이뤄진 합의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센토사 합의가 단순히 북한과 미국 사이의 두 나라에만 해당하는 외교 협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핵화와 맞물려 모든 국제사회에 적용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이행을 촉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어렵게 성사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자체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싱가포르 오차드 호텔에서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가 주최하는 '싱가포르 렉처'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 :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상생의 파트너'를 주제로 연설했다.

대한 의미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에 70년간의 적대 관계가 계속되다가 북미 두 정상이 처음으로 만난 것"이라며 "북한 정권이 출범한 이후 북한 지도자가 미국의 대통령을 만난 것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마주한 두 정상이 꼭질 있었던 과정 만큼이나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두 정상 사이의 담판한 결단에 의해 과거와는 전혀 다른 '톱 다운'으로의 접근 방식으로 이뤄진 정상회담이 중간과

중간에 좌초된 과거 비핵화 협상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만큼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그동안 기회가 될 때마다 신속한 합의 이행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배경과 무관치 않다. 또 문 대통령의 생각과 달리 합의 이행을 위한 북미 간 후속 협상이 지난 한 달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자 속도를 내달라는 신호를 북미 양쪽에 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이에 따른 미국의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이 센토사 합의의 핵심이라고 강조한 것은 비핵화에 대한 보상방안으로 경제 지원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미국의 인식이 잘못됐다는 점을 바로잡아 주고자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이 근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점을 강조해 비핵화 협상과 함께 맞춰 있는 남북미 3자 종전선언 논의의 불씨를 살려보려는 의지도 함께 녹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실제로 (합의를) 이행해 나가는 실무협상 과정에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식의 논쟁이 있을 수 있고, 여러 어려운 과정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한 것도 체제안전 보장과 연관된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뉴스시스